

한반도와 북방, 공간 구조에 관한 소고: 문화·국가·자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강 준 영

한국의국어대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 단장

정 기 용 · 박 홍 서

한국의국어대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화·국가·자본을 한반도와 북방 공간의 구체적 상황을 결정하는 핵심 행위 주체들로 설정한다. 본 논문은 들뢰즈가 제시한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 개념을 통해 문화·국가·자본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문화-국가 관계에서 국가는 원초적 문화를 탈영토화하고 동시에 국가 규범 및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영토화를 수행하는 반면 문화는 국가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탈영토적 속성을 보인다. 국가-자본 관계에서 양자는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무기의 고도화로 전쟁 가능성이 감소할수록 국가 간 상이한 정체성은 균등화되고 국가들은 그만큼 자본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본-문화 관계에서 자본은 로컬의 문화적 특수성을 소거시키거나, 문화를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상품화한다. 반면, 문화는 자본의 재영토화 논리에 저항하거나 자본이 운용되는 맥락을 설정한다. 한반도와 북방이라는 공간을 안정적인 협력 공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포용과 개방이 필수적이다. 대북 포용 및 개방 전략이 북한의 국가속성에 대한 세밀한 이해 없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완강한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에 기반한 접근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6A3A04064633)

주제어: 한반도, 북방, 들뢰즈, 재영토화, 탈영토화

차 례

- I. 서론
- II. 문화·국가·자본의 행위 양식: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
- III. 문화, 국가, 자본의 상호 작용: 순응, 갈등, 활용
- IV. 결론 및 전망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와 북방이라는 ‘공간(space)’을 문화·국가·자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하는 데 있다. 매시(Doreen Massey)는 공간을 단순히 ‘지표’라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 행위 주체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정의 내린다.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공간은 여러 정체성들이 혼재하는 ‘다중성(multiplicity)’을 내포하며, 하나의 정체성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성적(constructive)’ 성격을 가지게 된다.²⁾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와 북방이라는 공간 역시 고정된 그 무엇이라 볼 수 없다. 즉, 한반도와 북방은 여러 행위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는 구성적 객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의 철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북방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 주체를 문화, 국가, 그리고 자본으로 구분할 것이

2) 도린 매시 지음, 방경환·이영민·이용균 옮김,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2016), pp. 35-36.

다. 일종의 습속인 문화는 국가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초적이고 장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도 다양한 국가 주체들이 생성하고 소멸한다. 국가는 문화에 비해 공간의 경계를 ‘공식화’하고 경계 안을 통제·관리하려는 영토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에 비해 자본은 문화나 국가가 설정한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탈영토적 속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이 3가지 행위 주체들은 상호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융화, 갈등, 충돌 등의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와 북방 공간에서도 이들 행위 주체의 상호 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북방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과 같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정책적 맥락에 따라 수행됨으로써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또한, 국가에 비해 문화 및 자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문제점을 노정한다.³⁾ 북방을 ‘유라시아’와 같은 개념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들 역시 문화·국가·자본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각 변인을 고립적으로 분석하려는 행태를 보인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행태와 차별성을 갖는 시론

-
- 3) 하용출,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강태호 외 지음, 『북방 루트 리포트: 한동해環東海 네트워크와 대륙철도』 (파주: 돌베개, 2014);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외교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파주: 북스타, 2018); 김연규 역음,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음,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4) 켄트 콜더 지음, 오인석·유인승 옮김, 『신대륙주의: 에너지와 21세기 유라시아 지정학』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3); 백준기, 『유라시아 제국의 탄생: 유라시아 외교의 기원』 (서울: 홍문관, 2014);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파주: 서해문집, 2016).

적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는 특정한 국가 및 지역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화·국가·자본 변인이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 관계짓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현실적 정책 수립이 결국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 역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문화·국가·자본의 행위 양태를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문화·국가·자본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한반도와 북방이라는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II. 문화·국가·자본의 행위 양식: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

들뢰즈는 물질적·관념적 흐름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발생하는 공간을 ‘사회체(socius)’로 개념화하고, 그러한 통제를 가하는 구체적인 주체를 3가지의 ‘기계(machine)’로 표현한다. 그러한 기계는 ‘원시적인 영토기계(primitive territorial machine),’ ‘야만적인 전제기계(Barbarian despotic machine),’ 그리고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Civilized capitalist machine)’로 분류된다. 이들 기계는 밀접히 상호 연결돼 “욕망의 흐름들을 코드화하고, 새기고, 기록하며 규제되지 않는 어떠한 흐름도 없애버린다.”⁵⁾

5) 질 들뢰즈·펠릭스 고티에 지음, 김재인 옮김,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는 원시적인 토지기계에, 국가는 야만적인 전제기계에, 그리고 자본은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와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가 국가와 자본에 비해 원초성이 강하다면, 국가는 문화나 자본에 비해 영토성이 강하다. 자본은 문화나 국가와 달리 행위자 특유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보편성과 추상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국가·자본은 모두 공간 위에 존재하는 물질·관념적 대상들을 관리·통제하려 한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들뢰즈가 제시한 ‘영토화(territorialization)’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영토의 의미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기계가 통제하려는 공간 및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대상은 지리적 의미의 토지에서부터 물질이나 관념, 그리고 인간의 신체까지 다양하다. 결국, 영토화는 이러한 대상을 통제하려는 행위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영토화는 대상에 일정한 코드를 ‘기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드화’라는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탈영토화(탈코드화)는 통제로부터 탈출하려는 행위나 상황이 된다.⁶⁾ 통제된 공간이 개방되는 상황이라 할 수도 있다. 영토화와 탈영토화는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물리학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즉, 영토화(코드화)된 공간은 탈영토화(탈코드화)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통제 방식으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 재코드화- 된다. 들뢰즈는

열증』 (서울: 민음사, 2019) 3장; 폴 페튼 지음, 백민정 옮김, 『들뢰즈와 정치』 (서울: 태학사, 2005), pp. 223-241.

6) 본 논문에서는 영토화와 코드화, 탈영토화와 탈코드화, 재영토화와 재코드화를 등치어로 사용할 것이다.

이를 “넓은 등기는 새로운 등기 속에 벽돌 모양으로 쌓여”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탈영토화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⁷⁾

문화, 국가, 자본은 각각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의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국가는 문화를 탈영토화시키지만 동시에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영토화한다. 자본 역시 기본적으로 탈영토적 속성을 보이지만, 동시에 공간을 자본주의 규칙에 따라 재영토화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문화는 국가나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시적 토착성을 가진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문화를 “한 사회 내에서 우세하게 발현되는 가치, 태도, 신념, 지향점,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정의한다.⁸⁾ 인간은 출생 순간부터 이러한 문화에 의해 신체와 관념이 영토화된다. 국가가 인간을 ‘국민’으로 영토화하고 자본이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으로 영토화하는 것에 선행해 문화는 생물학적 인간에 사회적 코드를 기입한다. 친족관계, 마을, 사회공동체 등은 문화에 의한 개인의 영토화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공간의 영토화는 상대적으로 ‘공식적’이다. 국가는 문화에 의해 원시적으로 영토화됐던 공간을 탈영토화하고, 사회적 흐름들(인구, 상품, 자본 등)을 자신의 방식으로 새

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p. 33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새물결, 2003), p. 114.

8)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해리슨 편, 이종인 옮김,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2002), p. 11.

롭게 재영토화한다. 즉, 국가는 문화에 의해 수행됐던 “모든
결연과 혈연을 절단하고 연장하며, 이것을 신과 전제군주의 직
접 혈연, 전제군주와 백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한다. 이러
한 재영토화 과정에서 법은 “탁월한 형식적 통일체”로 기능한
다.⁹⁾ 베버(Max Weber)가 정의 내리듯이, 국가는 “일정한 영토
안에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정치공동체”가 된다. 재영토화
과정이 일정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유라 할 수 있다.¹⁰⁾ 푸
코(Michel Foucault)가 설명하듯이, 법은 허용과 금지라는 이항
구분을 통해 금지된 행위를 한 주체에 폭력을 가하는 수단으
로 작동한다. 들뢰즈가 전제기계를 ‘야만적’이라고 명명한 이
유라 할 수 있다.¹¹⁾

자본은 문화와 국가와는 또 다른 행위 양식을 드러낸다. 그
핵심적인 차이점은 자본이 문화나 국가와 같이 ‘고정된’ 속성
을 공간에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가 원초적 집단의
정체성을 기입하고 국가는 주권적 영토 공간 위에서 국민성
등을 기입하려 하지만, 자본은 그러한 고정된 속성을 모두 탈
코드화한다. 즉, 자본은 고유한 정체성을 ‘균질화’한다. 자본에
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자본과 당신
의 노동력”일 뿐이다.¹²⁾ 물론, 자본의 행위 양태 역시 절대적
탈영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문화와 국가에 의한
코드화를 해체하지만 어떤 행위 주체라도 경제적 논리에 따라

9) 질 들뢰즈·펠릭스 고티에 지음,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pp. 341-342; 질 들뢰즈·펠릭스 고티에 지음,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p. 741.

10) 막스베버 저·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나남, 2012), p. 20.

11)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1998), p. 278.

12) 질 들뢰즈·펠릭스 고티에 지음,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pp. 393-394/ 423.

움직이는 추상적 주체로 재코드화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행위 주체의 고유한 속성을 걷어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리’를 새롭게 부과하는 ‘초코드화’를 수행하는 것이다.¹³⁾

비유하자면, 자본은 욕망의 흐름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편해 통제하려 한다. 문화나 국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주체들에 특정한 코드를 기입했다면, 자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 주체들을 0과 1이라는 추상화된 수치로 코드화한다. 글로벌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공간(문화, 국가)의 특수성이 소거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상황을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모든 행위자를 1인 기업의 속성을 갖는 경제적 인간으로 구조화한다.¹⁴⁾ 자본이 국가와 달리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이유는 법이라는 폭력에 의탁하는 ‘야만적’ 국가와 달리 행위자들의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III. 문화, 국가, 자본의 상호 작용: 순응, 갈등, 활용

한 공간 안에서 문화, 국가, 자본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상호 관계는 동일한 주체 사이에도 형성되며 다른 주체들 사이에서도 형성된다. 이질적인 문화와 문화(국가-국가, 자본-자본) 사이의 관계가 전자의 경우라면, 문화와 국가(문화-자본, 국가-

13)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윤수중 옮김, 제국 (서울: 이학사, 2009), pp. 423-424; 이진경,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2002), pp. 562-563.

14)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142-147/ 226.

자본) 간 관계는 후자라 할 수 있다. 각각의 관계에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또한, 영토화 과정은 순응적이거나 갈등적인 양상을 보인다. 활용, 동화, 융합 등이 전자의 사례라면, 갈등, 대립, 충돌 등은 후자의 사례가 된다. 또한, 상호 관계의 대칭성도 존재한다. 어떤 주체가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1. 동일 주체간 관계

우선, 문화-문화 간 관계는 어떤 문화 주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또한 그것은 순응적인가 아니면 갈등적인가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할리우드 영화나 아메리칸 팝 뮤직 등 미국의 대중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된 과정을 보면 일방향이면서 동시에 순응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한류’의 사례도 유사하다. 해당국 현지인들은 소위 ‘K-00’로 표현되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미용, 패션, 게임 등 대중 문화를 선호하고 심지어 모방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식 미용과 화장법에 대한 관심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한인촌은 현지인들에게 한류를 체험하는 이색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상하이 홍취안루(虹泉路) 등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핫플레이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¹⁵⁾

한편,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의 발달은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기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BTS나 블

15) 차대운, “[르포] 이태원처럼 소주잔 들고 인증샷..상하이 ‘인싸’는 한인타운에,” 『연합뉴스』, 2020.8.18.

랙핑크와 같이 전문적으로 양성된 아이돌 그룹은 유튜브에서 단기간 내에 수억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순한 길거리 공연이나 케이팝 댄스 등의 콘텐츠 역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먹방(Mukbang)’은 그 단어 그대로 국제적으로 고유명사가 되고 있기도 하다.¹⁶⁾ 그러한 콘텐츠에 달린 댓글의 작성자들 역시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가 이미 외국인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영국남자’는 4백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다.

물론, 문화 간 영향이 반드시 순응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입되는 문화에 대한 토착문화의 반감과 저항이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조차도 그에 대한 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혐한류(嫌韓流)’라든지, 중국의 ‘항한류(抗韓流)’는 이를 보여준다. 이에 관한 담론은 일방적 문화 유입에 대한 단순한 반감에서부터, 일본 극우세력의 국수주의적·인종차별적 이유, 그리고 주로 중국에서 보여지듯 자국 문화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이유 등 다양한 맥락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다.¹⁷⁾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유입된 외래문화가 토착문화를 재영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범위를 넓히면, 인종, 종족, 종교, 지역 간 갈등 역시 문화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기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나 1990년대 르완다 내전, 현재 쿠르드족과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 등은 그 이면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16) 김은령, “美日 'MUKBANG' 열풍에.. 'K푸드'가 먹혔다,” 『머니투데이』, 2020.8.7.

17) 한은경, 장우성, 이지훈, “‘반한류’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6(3), 2007, 223-224.

떠나 기본적으로 상이한 문화와 문화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의 이민자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원거주민들의 차별적 시선은 문화 간 긴장관계를 보여준다.

문화간 갈등은 동아시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되놈,’ ‘쪽발이,’ ‘까오리 빵즈(高麗棒子),’ ‘조센진’ 등의 단어는 한·중·일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표상한다. 문화간 갈등은 국가 간 갈등과는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도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지역의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의 류큐인은 ‘야마토’라 불리우는 일본 주류문화에 의해 차별적 시선을 받고 있다.¹⁸⁾ 중국에서도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족의 한족에 대한 반감 등 한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라든지,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난민 등에 대한 차별의식은 이질적 문화 집단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조선족의 경우 중국 내에서 한족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반대로 한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간주되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기도 한다.¹⁹⁾ 이러한 인종·지역 간 차별 의식이 경제적 신분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갈등의 원초성을 방증한다.

둘째, 국가-국가 간 관계 역시 순응성과 대칭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관계는 명시적인 동맹관계와 적대관계를 양극단으로 하는 선분 위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한-미, 미-일, 북-중, 그리고 중-소 동맹 등은 전자의

18)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백영서·이한결 옮김,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파주: 창비, 2013).

19) 이정은, 『디아스포라연구』, 제12권 제1호(제23집), 2018, p. 165.

사례가 된다. 반대로, 현재 분쟁 중이거나 분쟁상황에 있었던 미-소, 미-중, 미-베트남, 중-소, 중-일, 중-베트남, 러-일, 남-북, 북-미, 중-인, 소-아프카니스탄, 미-아프카니스탄 관계 등은 후자의 사례가 된다.

물론, 국가 간 협력과 대립의 관계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국가 간 관계는 문화 간 관계에 비해 유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냉전기 한-중 관계나 한-소 관계는 적대관계였으나, 현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중관계 역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자본주의 국제질서 아래서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중-베트남 관계는 애초 협력관계에서 노골적 적대관계로 변화한 사례다. 양국은 베트남전 당시 소위 ‘원월항미(援越抗美)’라는 구호 아래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일 베트남이 소련에 경도되자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1979년에는 전쟁까지 발발하였다.

현재 미-중 관계도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2019년 양국 간 무역 총액이 5,58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그 상호의존의 수준이 매우 높다.²⁰⁾ 그러나, 양국은 정치나 군사 영역에서 갈등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남중국해나 타이완 등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홍콩보안법이나 신장위구르 등 인권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그 사례이다. 한-중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 경제영역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번째 무역상대국으로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각각 미국의 동맹국이지

20) United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만,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나 독도 문제 등에서 갈등하고 있다.

중-러 관계 역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협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 러시아는 인도와 ‘특별 특권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and Privileged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러시아는 인도를 지렛대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 역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²¹⁾ 서로 브릭스(BRICS) 회원국이고 심지어 ‘친디아’라는 개념까지 있을 정도인 중국과 인도가 현재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역시 국가 간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현실주의 측면에서 이처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상황은 왈츠(Kenneth N. Waltz)의 설명대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anarchy)’에 기인한다.²²⁾ 국제정치가 세계정부가 부재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면,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합리적인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관념이나 속성(제 2이미지)보다는 물리적 환경과 이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 이념, 그리고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21) Elizabeth Buchanan, “There’s no (new) China-Russia alliance,” *The Strategist*, 2020.6.26. <<https://www.aspistrategist.org.au/theres-no-new-china-russia-alliance/>>

22)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 88, 93, 97.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국이라도 대한반도 정책은 서구 국가들의 현실주의적 행태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²³⁾

셋째, 자본 간 관계는 자본의 특성상 문화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성’의 측면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은 문화나 국가의 고정된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탈영토적 속성을 보이며, 동시에 상이한 정체성의 행위자들을 경제적 공리에 따라 움직이는 보편화된 행위자로 재코드화한다. 따라서, 자본 간 관계는 국가 간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 즉, 자본 사이의 타협이 국가 간 타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중 양국이 타이완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 등에 있어 타협할 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에 비해 애플, 쉘컴, 보잉, 제너럴 모터스, 스타벅스 등과 같은 미 기업들은 그러한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미-중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중국과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여전히 막대한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²⁴⁾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 간 관계는 순수한 자유경쟁보다는 ‘카르텔’적 속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에 의해 법·제도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자본들은 서로 담합해 시장 지분을 적절히 나눠 가지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23)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 논총』 50집 4호 (2010), pp. 7-27.

24) Vikas Shukla, “10 US Companies With Highest Revenue Exposure To China,” Yahoo Finance 2020.8.3.

<<https://finance.yahoo.com/news/10-us-companies-highest-revenue-225350456.html>>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에서 두 명의 용의자가 의사소통을 통해 말을 맞추는 상황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본다면, 1차 세계대전을 자본주의 최고단계(제국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던 레닌(Vladimir Ilich Ulyanov)의 분석보다는 오히려 자본 간 타협과 안정적 관계를 주장한 카우츠키(Karl Kautsky)의 ‘초제국주의론’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도 있다.²⁵⁾

2. 상이한 주체 간 관계

1) 문화-국가: 재영토화와 탈주

한반도와 북방 공간의 복합적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종 주체 간 관계를 넘어 문화·국가·자본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문화를 재영토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혈연이나 지연, 언어 등에 의해 코드화되며, 그 결과 특정한 집단의 습속이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코드화된 인간을 공식적인 ‘국민’으로 재구성한다. 특정한 정체성이 기입된 인간에 새로운 코드를 덧씌우는(재코드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이미 존재하는 문화를 재코드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인위적으로 ‘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족에 관한 근대주의 담론은 이러한 논리를 강조한다. 이들

25) 레닌의 카우츠키 비판은 V.I. 레닌 지음, 『제국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1986), p. 127.

담론에 따르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 “인위적으로 세워진 역사적 구조물,” 혹은 전략적으로 ‘동원’된 정서로 규정된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도 언어, 전통, 기억, 혈통 등을 공유하는 종족 공동체가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대주의 담론이 원초적 문화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²⁶⁾

중국의 사례는 국가가 어떻게 문화를 코드화하는지 잘 보여준다. 봉건시기 중화제국에서 인간(老百姓)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황제 권력에 대한 복종의 주체로 코드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유교를 ‘자율적’ 복종을 유도하는 통치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군자 대 소인’이라는 이분법을 설정하고, 군자를 개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형 인간으로 규정해 사회 안정을 추구하였다. 주목할만 한 점은 중화제국이 사회안정이라는 대전제만 견지된다면, 다양한 원초적 문화적 습속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정통 대 이단’이라는 경직된 기독교 문화가 지배했던 중세 유럽과는 달리 봉건시기 중국에서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그리고 로컬의 다양한 토속신앙이 공존했다. 사실, 대외적으로도 중화제국은 주변 약소국이 중국을 상국으로 간주하는 대전제만 지킨다면, 속방의 외교와 내치에 자율권을 허용하였다. 중화질서의 소위 ‘속국자주’의 원칙이 그것이다.²⁷⁾

중국 국가에 의한 문화의 재코드화는 20세기 초 더욱 정교화되었다. 봉건시기 중국에서는 ‘중국인’이라는 개념이 부재하였다. 중국의 거주민들은 황제의 소유물로 코드화되었지만, 단

26) 아자 가트·알렉산더 야콥슨 지음, 유나영 옮김, 『민족: 정치적 종족성과 민족주의, 그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 (파주: 교유당, 2020), pp. 10-21.

27) 박홍서, “푸코가 ‘중국적 세계질서’를 바라 볼 때: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국제정치논총』 54집 4호 (2014), pp. 125-152.

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민족’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서구의 충격’으로 중화제국이 균열·붕괴되고 근대국가의 수립에 대한 엘리트 계급의 열망이 강해지면서 중국 대륙의 거주민들은 중국인으로 재코드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한족 민족주의’나 ‘오족(五族) 공화주의’는 불특정 백성을 동일한 종족으로 규정해 근대 국가 수립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혁세력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민족’이나 ‘국가’라는 단어가 1895년 아편전쟁 이후 각종 문헌에서 급증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²⁸⁾

신해혁명기 중국에서는 동시에 기존 유교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서구의 과학주의와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는 1910년대 ‘신문화 운동’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계몽주의자들은 중국의 위망은 결국 공자와 유교로 상징되는 봉건문화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²⁹⁾ 예를 들어, 루쉰(魯迅)은 소설 『광인일기』에서 유교문화를 식인문화로까지 비판하고, 『아큐정전』에서는 주체적이지 못한 중국인들의 자화상을 비판하였다. 유교문화에 대한 비판은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문화대혁명은 그 급진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혁 세력은 봉건주의 문화(구습) 타파를 폭력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신해혁명기 신문화 운동의 급진적 변형이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의 주요 사조였던 ‘신계몽주의’ 역시 유교문화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등 서방 사조에 전향적 태도를 보

28) 진관타오·류칭핑 지음, 양일모 외 옮김, 『관념사관 무엇인가 2 : 관념의 변천과 용어』 (서울: 푸른역사, 2010), pp. 223-266.

29) 郑大华, “西化思潮의 歷史考察,” 『湖南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34(2), (2005), pp. 106-107.

였다. 1988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하상(河殤)’은 황화의 탁한 이미지를 중국의 봉건 문화로 비유하며 비판하였다.³⁰⁾

물론, 현대 중국이 유교 문화를 비판만 한 것은 아니다. 유교의 변용을 통해 국가 통치에 활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전통문화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발양자이다”라는 시진핑의 발언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³¹⁾ 특히, 종합국력의 성장에 따라 중국은 유교문화를 소프트파워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공자학원’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유교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사실 등은 이를 보여준다. 유교문화를 국가통치에 활용하려는 전략은 공산당 정권뿐만 아니라 1930년대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장제스 정권은 소위 ‘존공복고(尊公復古)’의 기치 아래 국민들에게 유교규범(禮義廉恥)을 준수토록 하는 ‘신생활운동’을 대대적으로 주도했던 것이다.³²⁾

중국 국가는 유교문화에 대한 통시적인 재코드화뿐만 아니라, 로컬 문화에 대한 공시적인 재코드화 역시 추구하고 있다. 현재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벳, 내몽골, 홍콩 지역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억압적인 재영토화 전략이 이를 보여준다. 신장 위구르인들을 ‘재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수용소에 감금한다든지, 홍콩보안법 제정을 통해 복합적 정체성(중국, 영국식민지, 민

30) 代洪亮, “传统与现代的对立: ‘新启蒙主义’对于中西文化的态度.” 『济南大学学报』 20(2), (2010), pp. 18-19;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서울: 이산, 2004), pp. 685-691.

31) 崔小粟, “一年内三次亲近儒家 习近平为何如此强调重拾传统文化?” 『中国共产党新闻网』, 2014年09月25日.

32) 郑大华, op. cit., p. 109.

주주의)을 가져왔던 홍콩을 ‘중국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내몽골 지역에서 몽골어 과목을 축소하고 표준어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든지, ‘일국양제’를 강조하며 타이완 독립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 하는 행태도 다르지 않다. 로컬의 정체성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그것으로 재코드화하려는 행태라 할 수 있다.³³⁾

물론, 문화에 대한 국가의 재영토화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들뢰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외부에는 탈영토화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세계적 기계’가 존재하며, 대내적으로도 주변부 집단이나 소수자 집단 등의 ‘국지적 기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⁴⁾ 신장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이나 홍콩의 반중국 시위, 한족화 교육에 저항하는 내몽골 거주민, 그리고 타이완 독립 세력 등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문화의 탈영토화 속성은 중국 이외의 사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한류의 일본 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³⁵⁾ 또한,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이라는 비공식 제재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기층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서조차 남한 대중 문화가 음성

33) 박민희, “사라진 학자·예술가·아이들...민족을 개조하라,” 『한겨레』, 2020.09.15.; 장정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1주년과 국가보안법,” 『관행중국』, 2020.6.; 이기철, “내몽골도 신장, 티베트처럼 되나... ‘중국어 교육 강화,’” 『서울신문』, 2020.9.6.

3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p. 689.

35) 조은지, “일본인 안방에 불시착하는 4차 한류 바람,”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20.10.2.

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 매체가 “남조선 당국과 영화 제작사들이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허황하고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영화와 TV 극들을 내들리며 모략 선전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화의 탈영토성에 대한 국가의 경계심을 반증한다.³⁶⁾

사실, 문화와 국가 간 ‘긴장관계’는 다양한 텍스트에서 소재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최인훈의 소설 『광장』(1961)이나 김기덕의 영화 『남과 북』(1965)은 국가의 논리가 극대화된 전쟁 상황속에서도 국가에 의한 재코드화를 거부하려는 문화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전쟁포로로서 남한과 북한을 거부하고 제 3국행을 선택하는 『광장』의 주인공이나, 인민군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 귀순해 군사기밀을 전달하는 『남과 북』의 주인공은 원초적 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감벤(Giorgio Agamben)에 따르면, 전쟁(내전)은 사적관계(oikos)를 공적관계(polis)로 변화시키거나 양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³⁷⁾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해체되고 정치적 관계로 변화하는 상황은 이를 보여준다.³⁸⁾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원초적 사적 관계(문화)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의한 재코드화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들뢰즈의 지적대로 문화는 여전히

36) 박수윤, “북한, '사랑의 불시착' 인기에 발끈...‘우리 공화국 혈뜬어,’” 『연합뉴스』, 2020.3.4.

37) 조르조 아감벤 지음, 조형준 옮김, 『내전: 스타시스, 정치의 패러다임』 (서울: 새물결, 2017), pp. 40-53.

38)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파주: 돌베개, 2010).

히 그 토대를 이루는 ‘벽돌’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그 벽돌은 공적 관계를 파괴하고 다시 ‘돌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2) 국가-자본: 국가 우위에서 자본 우위로의 변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가 변인과 자본 변인 중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엄밀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상을 사후적으로 손쉽게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국가의 논리를 도입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한 것이다. 포퍼(Karl R. Popper)의 지적대로,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점성술에 가깝다.³⁹⁾ 이와 같다면, 국가의 논리 ‘이거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 중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가 혹은 양자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를 말해줄 때 비로소 유의미한 설명이 될 것이다. 국가가 국력 증강을 위해 자본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자본이 그 자체의 이윤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는가?

일반적으로 현실주의나 중상주의적 관점은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성을 가정한다. 국가가 자본을 ‘도구’로 이용해 국력(국부)을 증강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자본을 ‘포획’하는 상황이고 국가의 이익에 맞게 재영토화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동아시아 모델’이나 ‘중국모델’ 개념은 자본에

39) Karl R.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Routledge and Keagan Paul, 1972), pp. 33-39.

대한 국가의 우선성을 함축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델은 국가가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통제·관리한다. 특히,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중국모델은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강한 정부를 통해 정치안정을 이루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교육 및 인적자원을 대규모로 발전시킨다는 논리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현재 국유기업이 중국 GDP의 23%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국가에 의한 경제 운용을 명확히 보여준다.⁴⁰⁾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 경제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2021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規劃)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러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이 중국의 경제적 성취를 가능케 한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⁴¹⁾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역시 자본을 활용해 중국의 국가이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위안화 결제를 증가시킴으로써 미국 시장 및 달러에 대한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소위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 2025)’ 구상을 통해 첨단 산업 부분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지식에 대한 의존성 역시 완화하려 하고 있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지식을 받아들여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중국 경제의 대미 취약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⁴²⁾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자본을 관리·활용

40) Chunlin Zhang, “How Much Do State-Owned Enterprises Contribute to China’s GDP and Employment?” World Bank document, July 15, 2019.

41) 宋雄偉, “人民日報新論：五年規劃彰顯中國制度優勢,” 『人民網』, 2020.9.18.

해 대미 취약성을 완화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우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활용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공간에 정주하려는 국가와 탈영토적 속성의 자본 사이에는 일상적인 길항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은 국가에 의해 기입된 코드를 해체하고 보편타당한 새로운 코드로 대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이 따르는 ‘유일한’ 준칙은 어떤 행위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공리계(axiom)’이다. 즉, 자본은 상품화, 교환가치, 추상량, 이윤, 축적, 그리고 합목적성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⁴³⁾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오히려 자본에 의해 포획당해 자본에 ‘봉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국가는 특유의 정체성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공리계에 따라 행동하거나, 혹은 공리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⁴⁴⁾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작동과 국가의 불개입을 강조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되 그 개입 목적은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이라는 시장의 핵심 규칙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정권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42) 박홍서, 『미중 카르텔: 갈등적 상호의존』 (서울: 후마니타스, 2020), pp. 230-261.

43) 질 들뢰즈·펠릭스 고타리 지음,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pp. 418-423.

44) Ibid, p. 426.

전후 완전고용, 복지, 그리고 소비증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정자본주의가 지속되면서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되자 그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신자유주의 사조가 출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복지축소, 노동유연화, 규제약화, 자유경쟁 강화를 강조하는데, 신자유주의 국가는 이러한 논리를 충실하게 유지하고 보호한다.⁴⁵⁾

개혁개방기 중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자유주의 국가의 속성을 보인다. 사실, 개혁개방기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모델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고 관리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자본의 보편 논리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중심부의 초국 자본이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중국에 주목하였고, 덩샤오핑은 이를 잘 포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마오쩌둥 시기 소위 ‘철밥그릇’으로 불리던 단위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유기업 개혁의 명목으로 노동 유연화를 시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중국식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⁴⁶⁾

국가와 자본 간 우위성의 문제는 학술적 관점에 따라 그 답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중심성을 가정하는 반면 정치경제학은 자본중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자본의 논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핵무기와 같이 무기가 고

45)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 김덕민 역, 『신자유주의의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2014).

46)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5장.

도화될수록 국가간 전쟁 가능성이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2020년 중-인 국경 충돌이 육박전이나 개인화기 정도의 무기로 전개됐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공멸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가간 전쟁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요인이 국제관계에서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충돌은 ‘비영합(non-zero sum)’ 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미중 양국이 군사충돌은 극도로 회피하려 하지만 무역전쟁은 회피하지 않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가 간 관계는 이제 지정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경학(geo-economics)’의 문제가 된다. 전쟁의 목적과 수단 모두 경제가 되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다면, 국가는 점점 더 자본의 논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논리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국가의 이익은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제 징용문제를 문제화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아베 정권의 행태는 오히려 한국과 거래하던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삼성 등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은 이를 반증한다.⁴⁸⁾ 혹은 ‘미국이 위챗을 금지하면 중국은 아이폰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경고하면서 정작 그 글을 자신의 아이폰으로 트위터에 올렸다는 사실이나, 미 디즈니 영화 ‘물란’의 엔딩 크레딧에 신장 위구르 지역 공안국이 영화촬영에 협조해 주었다며 감사

47) Edward N. Luttwak,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 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 *The National Interest*, No. 20 (Summer 1990), pp. 17-23

48) 김종민, “日 반도체 소재 기업들 '탈일본' 지속..韓 수출규제 회피·미중 분쟁 대응 '두토끼!,” 『뉴시스』, 2020.10.4.

의 말을 올린 사실 역시 국가의 논리와 상충하는 자본의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⁴⁹⁾ 심지어 공고한 레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북한에서조차도 ‘장마당’과 같은 암묵적인 시장 논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⁵⁰⁾ 들뢰즈는 자본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냉소’라고 규정하였다.⁵¹⁾ 이러한 ‘소극(笑劇)’들은 그의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암시한다.

3) 자본-문화: 상품화와 맥락 설정

상기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아이폰 사용 사례는 자본에 의한 문화의 탈코드화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이폰을 사용할 때 그의 정체성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 무엇이 아니라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는 ‘소비자’가 된다. 최소한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국가에 의해 코드화된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정체성과 중화민족주의에 의해 중국인으로 코드화된 개인의 정체성은 소멸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에 의한 문화의 탈코드화는 자본주의 태동기 유럽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중세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던 명예, 우정, 덕성, 결투, 전쟁, 영웅 등 귀족적 이상은 점차 상업의 기반이 되는 ‘이성’이나 ‘합리성’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상업은 야만적 풍속을 다듬고 온화하게 한다”라는 18세기 초

49) 이보희, “물란, '신장자치구 감사' 엔딩크레딧 논란..'인권탄압' 눈 감은 것,” 『서울신문』, 2020.9.9.

50)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지음, 전병근 옮김, 『조선자본주의 공화국』 (서울: 비아북, 2017).

51) 질 들뢰즈·펠릭스 고티에리 지음,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pp. 384-385.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업(commerce)’이라는 용어가 ‘부드러움’이나 ‘세련됨’ 혹은 ‘사회적 교제’라는 개념과 혼용됐다는 사실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당시의 최고 가치였던 귀족적 덕성을 오히려 ‘야만성’이나 ‘폭력성’으로 간주했음을 시사한다.⁵²⁾ 자본은 봉건 시기 특유의 사회적 가치를 소거시키고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일반화시켰던 것이다.

한편, 모든 대상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의 기본 속성은 문화에도 적용된다. 자본은 문화마저도 교환가치로 재코드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 진보에 따른 대중매체의 발달과 자본주의 심화는 20세기 대중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봉건 시기 소수의 지배계층이 독점하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비영리적 귀족문화는 이제 영화, 음악, 공연예술 등의 형식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소비자로 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1인 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제 대중이 단순히 문화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생산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은 문화의 원재료라 할 수 있는 인간까지도 상품화하고 있다. 소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가지는 인격체라고 간주되기 보다는 그가 가진 ‘비교우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가지는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나 의료 등의 복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진다.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52) 엘버트 O. 허시먼 지음, 노정태 옮김, 『정념과 이해관계』 (서울: 후마니타스, 2020), pp. 107-111.

이 아니라 인적자본을 확장하기 위해 주어진다. 마치 좋은 등급의 육류를 확보하기 위해 좋은 환경의 목축 시설을 갖추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다.⁵³⁾ 세계은행이 건강 및 교육 수준 등과 같은 변수로 평가한 인적자본 지수 순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은 전 세계 2위로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미국은 26위, 러시아 34위, 중국은 46위에 위치하고 있다.⁵⁴⁾ 한국이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산업선진국으로 변화한 배경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자본만이 일방향적으로 문화를 재코드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역시 자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혹은 문화 자체가 자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문화와 자본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양자가 ‘이형동질(異形同質)’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루디외(Pierre Bourdieu)의 설명대로 개인에게 ‘체화(embodied)’된 특정한 ‘문화 양식(Habitus)’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전수·강화한다. 즉, 동일한 문화양식을 공유하는 계급은 그 문화를 토대로 자신들의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다.⁵⁵⁾

문화가 자본을 재코드화하는 방식은 주로 자본 운용방식의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교’ 자본주의, ‘동아시아’ 발전모델, ‘중국’ 모델 등의 개념과 같이 특정한 문화 양식이 자본주의가 운용되는 상황을 설정한다. 이들 자본주의 개

53)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226-232/ 243-244.

54) World Bank Group, *The Human Capital Project* (2018), p. 32.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0498/33252.pdf?sequence=5&isAllowed=y>

55) 삐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2006)

념은 자유경쟁 및 시장이라는 서구식 자본주의 개념과는 일정한 차이점을 드러내며, 해당 공간의 문화적 독특성은 그러한 차이점을 초래하거나 사후 정당화하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충성심, 복종심, 부지런함, 교육열, 가족주의나 집단주의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는 자본이 운용되는 맥락을 설정하고,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서구의 제국주의 이론이나 종속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주의 생활양식과 같은 독특한 문화 변인을 고려할 때 비로소 적실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⁵⁶⁾ 물론, 문화가 자본 운용의 맥락을 설정한다는 것이 자본의 논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아니다. 맥락 설정 자체가 자본의 논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적’ 자본주의에서도 상품화, 교환가치, 이윤과 같은 자본의 ‘공리계’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한편, 문화와 자본이 항상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자본이 문화의 원초성을 탈코드화하고 동시에 재코드화하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긴장’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수혜를 보는 자본 및 엘리트 관료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로 인해 삶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중국자본에 드러내는 적대감은 이를 보여준다. 중국자본에 의한 고속철도 사업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중단된 사실은 그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막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철도건설로 오히려 마을이 파괴되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56) 나혜심, “지구화시대의 문화 담론과 독일의 동아시아 인식 — 유교자본주의론을 중심으로,” 『사림』 65호 (2018), pp. 446-450.

지역 거주민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⁵⁷⁾ 시진핑 정권이 현재 일대일로를 ‘운명공동체’의 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 논리에 문화적 표피를 덧씌우려 하고 있지만,⁵⁸⁾ 자본과 문화 간 긴장 관계까지 일소할 수는 없다.

IV. 결론 및 전망

본 논문은 한반도와 북방의 공간 구조를 들뢰즈의 철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화, 국가, 자본을 한반도와 북방의 구체적 현상들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상호 수행하는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내용은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문화-국가 관계에서 국가는 원초적 문화를 탈코드화하고 동시에 국가 규범 및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영토화한다. 또한, 문화를 가공해 국가이익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반복한다. 국가에 의한 재영토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법적 수단을 통해 수행된다는 측면에서 강압적(폭력적) 특성을 보인다. 물론 문화가 국가에 의해 항상 재영토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 문화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문화는 국가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탈영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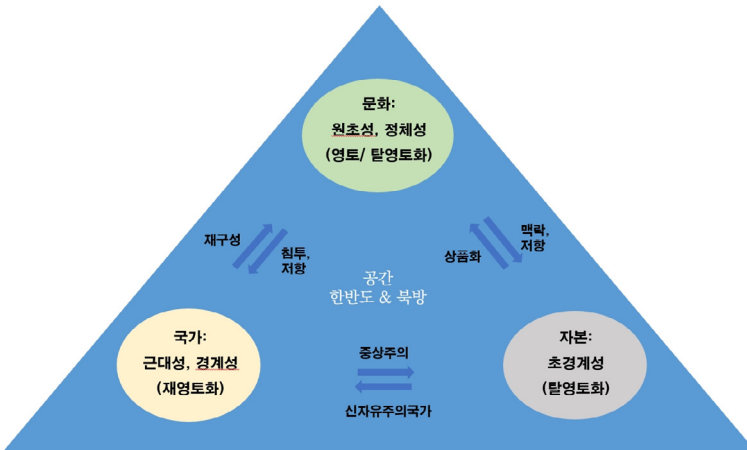
57) Bussiness Standard, “Local resistance, graft, insurgency in partner nations hinder China's OBOR,” 2017.11.12.; Daniele Carminati,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Debt Trap or Soft Power Catalyst?” E-International Relations, 2019.9.1.

<<https://www.e-ir.info/2019/09/01/chinas-belt-and-road-initiative-debt-trap-or-soft-power-catalyst/>>

58) 高祖贵, “推进‘一带一路’建设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国共产党新闻』. 2019年4月22.

속성을 보인다.

한편 국가-자본 관계는 자본을 활용하려는 국가주의(중상주의)적 양상과 신자유주의 국가와 같이 국가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무기의 고도화로 국가간 전쟁 가능성이 감소할수록 국가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한다. 국가들의 상이한 정체성이 소거되는 바로 그만큼 국가들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공리계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 자본-문화 관계에서도 자본은 로컬의 문화적 상이성을 소거시키거나, 문화를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상품화한다. 반면, 문화는 자본의 재영토화 논리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자본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사회적 맥락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림 1> 한반도와 북방의 공간구조

한반도와 북방이라는 공간을 문화·국가·자본으로 설명한 본 논문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유의

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한반도와 북방이 완전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공간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개방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의 개방 없이는 한반도와 북방은 단일한 공간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문화와 자본의 흐름에 심각한 장애로 기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북방 공간 내에 위치한 북한이라는 ‘게토(ghetto)’를 어떻게 개방시킬 것인가? 이에 관한 구체적 전략 수립은 후속 연구의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그러한 분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남북한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나, 분단 이후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우 이질적인 주체로 변화하였다. 양자 모두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남한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주요 산업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그 공간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국가의 논리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국가로서 남한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편승한 반면, 북한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개방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에 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북방 공간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주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개방은 서로 다른 역사 단계에 있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타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 할 수도 있다. 이미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한 주변국들이 전자본주의적 속성(야만적 전제기계)을 여전

히 전면에 표출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자본주의 국제질서로 편입시키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방 전략은 자칫 북한의 경직된 국가체계의 완강한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극단적으로 근대 제국주의 체제가 제 3세계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적대적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마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그러한 상황은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북한을 북방 공간의 안정적인 행위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포용 전략의 수립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남북한이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문화에 기반한 대북 접근은 북한 포용 전략의 현실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호 외 지음. 『북방 루트 리포트: 한동해環東海 네트워크와 대륙철도』. 파주: 돌베개, 2014.
- 김연규 엮음.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김은령. “美日 'MUKBANG' 열풍에.. 'K푸드'가 먹혔다.” 『머니투데이』, 2020.08.07.
- 김종민. “日 반도체 소재 기업들 '탈일본' 지속..韓 수출규제 회피·미중 분쟁 대응 '두토끼'.” 『뉴시스』, 2020.10.4.
- 나혜심. “지구화시대의 문화 담론과 독일의 동아시아 인식 — 유교자본주의론을 중심으로.” 『사림』. 65호 (2018)
-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지음. 전병근 옮김. 『조선자본주의의 공화국』. 서울: 비아북, 201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엮음.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 도린 매시 지음. 방경환·이영민·이용균 옮김.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2016.
- 막스베버 지음.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나남, 2012.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서울: 이산, 2004.
-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

울: 동문선, 1998.

박민희. “사라진 학자·예술가·아이들…민족을 개조하라.” 『한겨레』. 2020.09.15.

박수윤. “북한, '사랑의 불시착' 인기에 발끈…‘우리 공화국 혈통어’.” 『연합뉴스』. 2020.3.4.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파주: 돌베개, 2010.

박홍서.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50집 4호 (2010).

박홍서. “푸코가 ‘중국적 세계질서’를 바라 볼 때: 중국적 세계질서의 ‘통치성’.” 『국제정치논총』. 54집 4호 (2014).

박홍서. 『미중 카르텔: 갈등적 상호의존』. 서울: 후마니타스, 2020.

백준기. 『유라시아 제국의 탄생: 유라시아 외교의 기원』. 서울: 홍문관, 2014.

베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2006.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해리슨 (편). 이종인 옮김.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2002.

아라사끼 모리테루 지음. 백영서·이한결 옮김. 『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파주: 창비, 2013.

아자 가트·알렉산더 야콥슨 지음. 유나영 옮김. 『민족: 정치적 종족성과 민족주의, 그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 파주: 교유당, 2020.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윤수중 옮김. 『제국』. 서울: 이학사, 2009.

- 앨버트 O. 허시먼 지음. 노정태 옮김. 『정념과 이해관계』. 서울: 후마니타스, 2020.
-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파주: 북스타, 2018.
- 이기철. “내몽골도 신장, 티베트처럼 되나... ‘중국어 교육 강화’.” 『서울신문』. 2020.9.6.
-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파주: 서해문집, 2016.
- 이보희. “물란, ‘신장자치구 감사’ 엔딩크레딧 논란..‘인권탄압’는 감은 것.” 『서울신문』. 2020.9.9.
- 이정은. 『디아스포라연구』. 제12권 제1호(제23집) (2018).
- 이진경.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2002.
-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 김덕민 역. 『신자유주의의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2014.
- 조르조 아감벤 지음. 조형준 옮김. 『내전: 스타시스, 정치의 패러다임』. 서울: 새물결, 2017.
- 조은지. “일본인 안방에 불시착하는 4차 한류 바람.”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20.10.2.
- 장정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1주년과 국가보안법.” 『관행 중국』. 2020.6.
- 진관타오·류칭핑 지음. 양일모 외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2 : 관념의 변천과 용어』. 서울: 푸른역사, 2010.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새물결, 2003.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민음사, 2019.

- 차대운. “[르포] 이태원처럼 소주잔 들고 인증샷..상하이 '인싸'는 한인타운에.” 『연합뉴스』 . 2020.8.18.
- 켄트 콜더 지음. 오인석·유인승 옮김. 『신대륙주의: 에너지와 21세기 유라시아 지정학』 .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3.
- 폴 패튼 지음. 백민정 옮김. 『들뢰즈와 정치』 . 서울: 태학사, 2005.
- 하용출.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한은경·장우성·이지훈. “‘반한류’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 16(3)(2007).
- V.I. 레닌 지음. 『제국주의론』 . 서울: 백산서당, 1986.
- Buchanan, Elizabeth. “There’s no (new) China-Russia alliance.” *The Strategist*, 2020.6.26.
<<https://www.aspistrategist.org.au/theres-no-new-china-russia-alliance>>
- Bussiness Standard. “Local resistance, graft, insurgency in partner nations hinder China's OBOR.” 2017.11.12.
- Carminati, Daniel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Debt Trap or Soft Power Catalyst?” *E-International Relations*, 2019.9.1.
<<https://www.e-ir.info/2019/09/01/chinas-belt-and-road-initiative-debt-trap-or-soft-power-catalyst/>>
- Foucault, Michel.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Luttwak, Edward N.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 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 *The National Interest*. No. 20 (Summer 1990).

Popper, Karl 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Routledge and Keagan Paul, 1972.

Shukla, Vikas. “10 US Companies With Highest Revenue Exposure To China,” Yahoo Finance 2020.8.3.

<<https://finance.yahoo.com/news/10-us-companies-highest-revenue-225350456.html>>

World Bank Group. *The Human Capital Project* (2018).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0498/33252.pdf?sequence=5&isAllowed=y>

United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검색일: 2020.9.3.>

Zhang, Chunlin. “How Much Do State-Owned Enterprises Contribute to China’s GDP and Employment?” World Bank document, July 15, 2019.

崔小粟. “一年内三次亲近儒家 习近平为何如此强调重拾传统文化?” 『中国共产党新闻网』. 2014年9月25日.

代洪亮. “传统与现代的对立: ‘新启蒙主义’对于中西文化的态度.” 『济南大学学报』 20(2) (2010).

高祖贵. “推进‘一带一路’建设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国共产党新闻网』. 2019年4月22日.

宋雄偉. “人民日報新論: 五年規劃彰顯中國制度優勢.” 『人民網』. 2020年9月18日.

郑大华. “西化思潮的歷史考察.” 『湖南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34(2) (2005).

이름 : 강준영
E-mail : junka009@hanmail.net

이름 : 정기웅
E-mail : geraldjung@hotmail.com

이름 : 박홍서
E-mail : hongseo@hanmail.net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Area: The Interaction of Culture, the State, and Capital

Jun Young Kang

*Head of HK+ National Strategy Research Project Agen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iwoong Jung, Hongseo Park

*Research Professor of HK+ National Strategy Research Project Agen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area as a spac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culture, the states, and capital. To this purpose, the authors capitalize on Gilles Deleuze' concept, 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state, state not only deterritorializes primitive culture but also simultaneously reterritorialize that to be suitable for the state system. On the other side, culture has a tendency of crossing the state border. In the state-capital relations, the low possibility of war among states in the nuclear age makes states rely on the logic of economics more than ever. Even almost all countries behave like homo-economicus despite their different identities. In the relations between capital and culture, capital not only homogenizes but also commercialize cultural localities while culture sets context in which capital operates.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area as a stable space for peace and cooperation, engaging isolated North Korea is indispensable. Cultural approach to this problem can be a constructive alternative in that such strategy relieves North Korea's antipathy to open door policy.

Key words: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rn Area, Deleuze, Reterritorialization, Deterritorialization.*